

No. 2013-40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0. 07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과제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현황지표

- 엔화환율 :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발표로 약세
- 장기금리 :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발표로 하락세

구 분	9.30(월)	10.1(화)	10.2(수)	10.3(목)	10.4(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7.75	98.37	98.05	97.65	97.25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98.67	1,093.46	1,095.81	-	1,105.56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455.80	14,484.72	14,170.49	14,157.25	14,024.31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80	0.660	0.640	0.640	0.65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8월 무역수지는 9.6천억엔 적자로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 수출물량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엔저에 의한 연료수입가격 상승 영향
- * 對한국 무역수지는 1.8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P)			3.8(P)			-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	-
對한국 투자	(40)	7.7			9.1			-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보치(개정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기로에 선 한일경제관계』 일본종합연구소, 10월2일

*출처:<http://www.jri.co.jp/page.jsp?id=23860>

-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법인세감세의 제조업공동화 방지효과』 다이와종합연구소, 10월3일

*출처: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sothers/20131002_007748.pdf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과제

□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

- 일본정부가 최대 정책현안인 소비세 증세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부터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각의에서 결정
-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하시모토 내각에서 3%에서 5%로 인상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임
- 소비세율 3% 인상으로 연간 8.1조엔 소비세 증수가 예상되나, 초년도인 2014년도에는 약 5조 엔에 그칠 것으로 추산

□ 6조엔 규모의 증세 대책

- 아베총리는 각의결정 후 증세대책으로 1조엔 규모의 기업 감세와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책정할 방침
-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하강을 피하기 위해, 5조엔 규모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초에 편성할 예정인데, 공공부흥사업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급조치와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급이 중심임
- 경제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와 국채매입비용의 절약분으로 충당하여 신규 국채의 추가발행을 원칙적으로 피할 방침
- 소비세 증세에 대한 핵심 대응책은 기업의 감세임
- 첨단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감세제도 신설,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에게 세제상 우대제도 확충, 지진피해 복구대책으로 실시되어 온 특별법인세 폐지(1년 앞당겨 폐지) 등
- 특별법인세 폐지는 12월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하는 한편, 중요 관심사의 하나인 법인실효세율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2015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견

□ 세율 10%로 인상안은 유보

- 아베 총리는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역설

- 소비세증세로 일단은 재재건전화가 유지되고, 장기금리 상승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
- 그러나 2015년에 인상할 예정이었던 소비세율 추가인상(8%→ 10%)에 대해서는 판단시기를 포함하여 유보의 뜻을 비침

□ 소비세 수입의 용도와 사회보장제도 개혁

- 예산총칙에 의하면, 소비세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연금과 간병, 고령자의료 등 이른바 고령자 3대 경비는 2011년에 22.1조 엔에 이를 전망
 - 이중 12.8조 엔은 소비세 수입으로, 9.3조 엔은 적자국채 발생으로 각각 충당하고 있는데, 현행 세율 5%로는 부족분이 2015년도에 12.8조 엔으로 확대
 - 이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에 2.7조 엔의 세수가 예상되는 소비세를 5%로 인상하여 10%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세와 사회보장일체개혁의 출발점임
- 일본정부는 증세분의 일정액은 채무상환이 아닌 사회보장비에 충당하고, 2020년도에는 부족분이 약 18조 엔에 달하게 되나 2015년 추가 인상 세율 10%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소비세 3% 인상으로 연간 8.1조 엔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2014년도에는 증세 초년도인만큼 경과조치 등의 영향으로 5.1조 엔의 세수증가에 그침
 - 후생노동성은 5.1조 엔을 차입으로 충당해온 기초연금의 국가부담 환원(1/2로 2.9조엔),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1.5조엔), 의료보수 경비(2,000억엔)에 충당하고, 남은 5,000억 엔은 양육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난치병대책 등 사회보장을 실천하는데 배분할 계획임
- 아베 총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수분은 사회보장에만 사용한다고 명언했으나, 소비세 증세와 세트로 발표한 경제대책은 증세의 취지를 애매하게 할지 모른다는 지적

□ 소비세 증세이후 경제성장 전망과 과제

- 15개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0월 1일 시점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2013년도 실질경제성장율은 평균 2.8%

- 소비세가 인상되는 2014년도는 수요 위축으로 성장률이 0%대 전반까지 저하되나, 5조 엔의 경제대책으로 성장률이 0.9%전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일본경제의 저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율(0.7%정도)를 상회하는 수치로, 국내 수급 갭이 축소되어 디플레이션 탈출이 겨우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이 같은 낙관적인 회복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당면한 과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물가와 임금인상 움직임
- 일본은행 예측으로는 2014년도는 소비세 증세분을 포함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3% 상승하고,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금보험료도 매년 증가
- 성장력을 높임으로써 임금인상을 뒷받침하고 부담증가의 영향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회복이 어려움

□ 디플레이션 탈출과 재정재건 양립의 해법은 기업주도의 선순환

- 아베 정부가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 기업이 주도하는 선순환 흐름임
 - 국민들의 반발을 각오하고 부흥특별법인세 폐지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한 것은 기업 주도의 회복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모색하는 외에 잠재성장율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딱히 없었기 때문임
- 초점은 기업의 수익환경 정비에 모아지고 있는데, 고용을 둘러싼 규제완화와 TPP교섭 타결 등 현안은 많음
 - 아베 총리가 증세결정을 하기 직전 1일 오전, 산업경쟁력회의가 국가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의 실행방침을 정했으나, 전략특구를 언제 실현할 것인지는 명기하지 않음
 - 기업의 관심이 높은 해고규칙과 기업의 농업분야 참여 촉진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음
- 개혁 추진이 지연될 경우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경기후퇴로 이어질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는 경우 2015년 10%의 소비세 증세에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일본경제가 유지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디플레이션 탈출과 재정재건의 양립은 아직 모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③ 경제정책동향

□ 신형 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엔저 및 해외투자 촉진 효과 예상

- 신형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계좌개설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
 - 동 제도는 개인 금융자산 중 절반이상을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1,600조엔 규모의 자산을 중장기 투자로 전환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제도임
 - 기대한대로 개인 금융자산이 움직이게 되면 일본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고 엔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침
- 일본증권협회에 의하면, 시행 첫날인 10월 1일 시점에서 NISA의 계좌개설 수는 322만 건에 달할 전망
 -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계좌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NISA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엔의 투자원본에서 얻는 매매이익과 배당금을 최장 5년 동안 비과세
 - 일본정부는 세제우대로 예금에서 주식 등으로의 자금전환을 기대하고 있음
- 외환시장 관계자들이 무엇보다도 개인금융자산 중 어느 정도가 투신을 통해 엔 매도로 이어질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음
 - 엔 매도를 수반하는 것은 주로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투신인데, NISA의 원조격인 영국 ISA(주식형)의 경우 약 80%를 투신이 점하고 있고 외화표시 자산이 공모투신에서 점하는 비율은 30~40%정도임
 - 노무라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2014년도는 투신을 통하여 2013년보다도 1조 7,000억 엔 증가한 6조엔 규모의 엔 매도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달러당 4엔 정도의 엔저효과가 있다고 분석
- 일본의 개인투자자들은 특히 해외 외환시장참가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음
 - 개인 금융자산의 1%가 해외투자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16조 엔으로, 경상흑자의 3배에 상당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
 - 미즈호은행에 의하면, 개인들의 외화성자산은 금융자산 전체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력은 충분하다는 지적
 - 일본의 FX거래량은 월 수백 조 엔으로 세계 최대 규모
 - 일본의 FX투자자들은 환율의 흐름에 역행하는 성향이 강하여, 엔고국면에서 엔을 팔아 달러를 사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단기매매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움직이더라도 장기적인 환율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임

□ 간병·의료 시설 관련 REIT설립 자유화로 주식시장 잇따라

- 노인 홈이나 병원 등 간병·의료 시설에 운용대상을 한정해왔던 부동산투자신탁(REIT)이 이르면 2014년 일본에서 최초로 상장
 - 내년부터 간병·의료시설 전문REIT 설립을 해금한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NEC 계열 리스회사 등 200억 엔 규모의 REIT를 발족시키는 외에, 신세이(新生)은행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 REIT는 투자가의 자금이나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임대수입과 매각이익을 투자가에 환원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는데, 운용자산은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시설이 많음
- 이번에는 유료 노인 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도 상장은 가능하나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재무상황 등이 파악하기 어려운 등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상장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일본정부는 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에서 간병·의료시설 전문REIT의 가이드라인을 정비방침을 제시
 - 현재 금융청과 국토교통성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재무상황 정보개시와 REIT와의 계약조건 등의 룰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봄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
- 일본정부의 해금방침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
 - 미쓰이스미토모와 캐피털솔루션, 대형 간병시설운영 업체인 쉽케어홀딩스가 이르면 내년 6월 200억엔 규모의 전문 REIT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
 - 시설 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대형은행과 펀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리스업체, 간병시설의 평가 및 정보수집력을 가진 쉽케어홀딩스사가 연대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생은행도 1천억 엔 정도의 전문 REIT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라 간병시설 입주희망자와 의료서비스의 수진자들이 늘어날 전망
 - 간병 등의 시설은 동일 사업가가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변경 등으로 임료가 대폭 하락할 위험도 오피스빌딩에 비하여 낮은데다, 일정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투자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정부가 민간자금을 활용한 간병·의료 시설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임
 - 특별 노인 홈에는 현재, 일본 전국에서 약 50만 명이 입소해있으나, 2025년에는 50% 많은 73만 명분의 정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

4 일본기업동향

□ 일본의 민·관, 수소연료 분야에 주력

- 치요다화공(千代田化工)건설이 2015년 가와사키에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의 대형공급기지를 건설
 - 연료전지차의 일일 기준 4만대분에 충전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연료비용이 30%나 절감되는데, 투자액은 300억 엔 정도
 - 연료전지차는 도요타와 혼다가 2015년에 일반 소비자용 시판차를 발매할 계획이며 오사카가스 등도 수소연료를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연료전지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만드는 전기에 의해 모터를 돌려 달리는 차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일본 국내에서 2025년에 약 200만대가 보급될 전망
 - 일본정부는 수소연료의 충전거점인 수소 스테이션을 2015년까지 100개소를 정비할 계획
- 수소연료는 현재 석유로부터 화학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편으로 입방미터 당 약 120엔
 - 그러나 치요다화공의 기지에서 대량 공급되는 경우 80엔까지 비용이 저하되며 앞으로 설비개량 등으로 휘발유 수준의 60엔에 근접시킬 방침
- 치요다화공은 수소를 유기용제의 톨루엔에 용해시켜 상온으로 액체화하여, 다시 뽑아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산유국에서 원유채굴시 나오는 수소를 액화하여 선박으로 운반시키는데, 가와사키의 기지에서는 대형설비를 도입하여 촉매로 톨루엔과 수소를 분리시키고 있음
 - 가와사키 기지의 공급능력은 6억 입방미터로 수도권의 수소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압축하거나 액화하여 전용차로 배송
 - 연료전지차는 탱크에 약 50입방미터의 수소를 압축하여 저장, 약 500킬로 주행가능하며, 동 기지로부터의 공급은 보급대수로 50만대분의 연료에 상당
- 가와사키중공업은 호주에서 석탄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일본으로 수입할 계획을 추진
 - 러시아에서에서는 이르면 2025년에 수소공장을 건설할 방침인데, 투자액은 200억~300억엔에 이를 전망
- 오사카가스는 이르면 금년 중 수소스테이션에서 도시가스로부터 시간당 300입방미터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실용화할 것으로 예상

□ 일본 대기업들의 경기 체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 일본은행이 발표한 9월 단칸(短観: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은 기업의 수익 동향을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가 대기업에서 6월의 조사와 비교하여 8포인트 상승
 - * 단칸은 일본은행이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전국 기업의 업황판단, 수익, 설비 투자계획 등을 앙케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금융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 가운데 하나임
- 더욱이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2007년 12월 조사 이후 최고수준으로서, 그만큼 경기회복을 반영
- 엔고 시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소비세 증세 전 가수요 때문에 소매업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 공공사업 확대로 건설업도 개선되고 있음
- 시장의 주목대상인 대기업(제조업)의 2013년 상정환율은 달러당 94엔 45전으로 전회 조사(91엔 20전)에 비하여 엔저 방향으로 수정
 - 현재 환율보다 4엔 정도 엔고수준을 예상하고 있어 현재 환율이 계속되면 금년도 업적은 더욱 상향조정될 여지가 있음
- 업황판단 DI를 업종별로 보면, 28개 업종 중 19개 업종이 개선
 - 자동차가 전기비 11포인트 상승으로 3분기 연속 상승, 전기기계도 13포인트 상승
 - 목재·목제품이 9포인트 상승으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외에, 요업·토석제품도 14포인트 상승, 1991년 이후 최고수준

5 한국관련워치

□ 일본의 후발의약품 업체, 국내 의약품 업체에 생산위탁

- 일본의 후발의약품 제조업체인 닛치이코(日医工)가 한국의 의약품제조업체인 바이넥스에 출자하고 업무제휴에 합의
- 인체 내에 성분을 응용하여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일종인 후발약 생산을 위탁하게 되는데, 우선 관절류마티즘 치료약인 후발약 생산을 위탁하여 2016년 3월까지 일본에서의 발매를 목표
- 바이넥스는 코스닥에 상장, 연간 매출액 약 50억 엔, 닛치이코는 가까운 시일 내 제3자 할당증자 인수방식으로 기존 주주로부터의 매입으로 바이넥스의 주식 12.6%를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은 약 20억 엔으로 최대 15%까지 출자 비율을 높일 계획

□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 화재, D램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 커

- 주요 반도체메모리 제품인 PC용 디램의 9월 전반 거래가격이 가격이 전월에 비하여 25%나 폭등
 - 9월 초 발생한 한국 하이닉스의 중국공장 화재로 인한 공급불안이 그 배경으로 내년 이후에나 생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
 - SK하이닉스의 공장은 세계 D램 생산의 약 15%를 점하는 동사의 주력 거점으로서 공급이 화재 이전 공급수준을 되찾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D램 업체는 일본 엘피다메모리의 파산 등으로 사실상 대기업 3개사에 의한 과점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1개사의 생산차질이 시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D램 업체들은 세계적인 PC판매 감소로 PC용 생산을 축소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단말기용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공급량 감소로 PC용 가격이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에 걸쳐 대폭 상승한데 이어 7월 이후에는 SK공장화재로 다시 상승
- 수요 면에서는 D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온 모바일 단말기용 분야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저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당 메모리 탑재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상정한 것보다 모바일 D램의 성장이 부진
- 특히 스마트폰의 기억매체 등에 사용되는 NAND형 플래시메모리의 9월 판매가격이 소폭 상승, 63메가비트 상품이 개당 6달러로 전월부터 약 2% 높은 가격에 거래
 - 직접적인 화재영향은 없으나 SK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던 D램에서 NAND형 플래시로 생산전환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